

英 발주자·근로자 모두 참여 '건설 설계관리' 효과 톡톡

英国 : 発注者・作業者の関わりが「建設設計管理」に有効

줄지 않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안전 선진국'은 어떻게 막았나

국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가운데 '재래식 재해'로 불리는 추락사고가 여전히 줄어 들지 않고 있다.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지 못하면 건설업 사망사고 줄이기가 어렵다는 것에 정부와 업계, 노동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추락(떨어짐)재해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499명 중 추락에 의한 사망자 수는 261명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와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함께 증가했다. 작년 건설업 사망자 506명(7명 증가) 가운데 276명(15명 증가)이 고소작업 중 추락으로 사망했다. 여전히 건설업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과 일본 등의 상황은 어떨까. 이들 국가는 50여년 전부터 산업현장의 안전 관련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건설업, 이 가운데 추락재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

프로젝트 부지 선정단계
안전 고려한 계획 세워
추락사고 사망률 줄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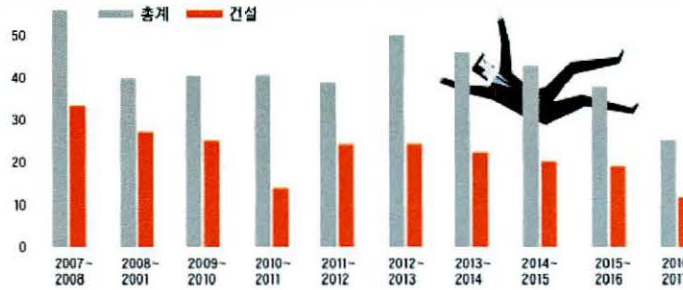
산업별 자율적 규제 통해
연 10%씩 감축 목표 추진

났다. 다만,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한국보다 적었다.

이탈 조 안전보건공단(이하 '떨어짐 사고사망 재해 예방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영국과 일본 노동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국의 사고현황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케빈 마이애스 전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부청장은 '떨어짐 사고사망 재해 위험관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영국에서 추락은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닌 산재 사망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면서 "이 같은 '재래식 사고'의 원인은 비숙련 인력의 단기 근무, 부실한 계획, 감독 및 모니터링의 부실 등으로 좁혀진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떨어짐 사망사고자 추이 (단위:명)



최근 5년간 영국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1년 평균 40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28% 수준이었다. 해마다 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한국과 비교해선 월등히 적은 수준이다.

영국의 경우 무려 18년 전인 2000년에 '산업안전보건 전략계획'을 수립한 후 2010년까지 10년간 사망사고 및 중대사고 발생률을 연간 10%씩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건설업과 농업, 의료서비스업 등 3대 위험 업종과 추락 사고사망 재해를 포함한 5대 유해 위험성을 지정해 집중 관리했다.

케빈 전 부청장은 발주자부터 근로자

까지 모든 공사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업 설계 관리 규칙'(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의 효과도 컸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별 현실에 맞는 자율적 규제도 시행됐다.

그는 "현장 관리자뿐 아니라 고객과 설계자가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 개입해 안전에 기반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이 시작된다"며 "프로젝트와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야수와 도요사와 일본 노동안전위생총합연구소(JNIOOSH) 소장은 '떨어짐 예방에 관한 일본의 정책과 전략'에 대해 발표

했다.

일본은 한국의 건설현장이 처한 현실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일본의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323명을 기록했다. 2010년부터 매년 300여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왔다. 이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건설업 사망자의 41.8% 수준인 135명에 달했다. 전체 산업 중 추락사고 사망자 비율(26.4%)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야수와 소장이 속한 JNIOOSH는 지난해 비계 추락사고 예방위원회를 조직해 추락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로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계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일본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성격의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은 올해 각각 건설업 추락사고에 대한 조치 강화 실무회의와 공공건축 사고 예방대책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저감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중기자 kwon88@

공동기획
안전보건공단 건설경제